

II. 금주의 포커스

『경제 조기 회복의 장애 요인』

노사정 합의 지속의 필요성: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 해고의 중단,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별 교섭 보장 등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음. 노사정위원회의 와해가 경제 회복 지연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됨은 자명한 사실이며 노사정위의 존재가 근로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력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해야 함

4. 노사정 합의 지속의 필요성

□ 노사정 합의 와해 조짐과 그 배경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 한국노총의 ‘조건부 탈퇴’ 선언으로 노사정위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 이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노사정위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불만 때문임

-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를 공식 탈퇴

-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유로 ▷금융부문과 공공부문, 대기업 구조조정이 노사정위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실직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 허용 등과 같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음 ▷노사정위가 실질적인 사회합의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함
- 이어 민주노총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별 교섭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3~4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함
- 그러나 “정부가 4개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면 대화할 용의는 있다”고 밝혀 대화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상태임

- (한국노총) ‘조건부 탈퇴’를 결의

- 한국노총은 3월말까지 노사정위 탈퇴를 유보함
- 그러나 설정 시한내에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 및 실질적 사전협의 보장 ▷중양고용안정협약 체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정부가 성의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

□ 노사정 합의 유지의 필요성

노사정위는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결정된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며 사회통합력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이런 노사정위가 와해될 경우 경제회복 지연과 대외신인도 저하가 우려됨

- (노사정위의 순기능)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결정된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며 사회통합력을 유지시키는 순기능을 수행

- 노사정위는 중앙차원의 협의라는 분쟁 여과 과정을 통해 현장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걸러내는 순기능을 수행, 이를 통해 정부의 노사관계 관리 능력도 제고될 수 있음
-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에 비해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속도가 늦추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결정된 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반목이나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즉 사회통합력을 유지시켜내는 순기능을 수행함. 이를 통해 경제 안정과 향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 특히 외환위기 직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의 도입 과정에서 노사정간에 극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노사정위 와해의 영향) 경제회복 지연과 대외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우려

- 노사정위가 와해될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어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노사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어 노사 갈등의 완충 기제로서의 노사정위 역할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
- 또 노사 갈등 증폭에 따른 신인도 저하와 외국자본 유입 지체나 유출이 우려됨

□ 노사정 합의 유지의 함정과 필요조건

노사정위의 기본 방향은 사회통합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사정 합의를 견지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함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야 함

- (구조조정과 사회통합력 유지) 두가지의 동시 달성이 바람직

- 구조조정은 외환위기에 직면했던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한국 경제에 국한된 과제는 아니고 오히려 90년대 세계 경제의 추세임
- 구조조정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집단 반발과 갈등 양산으로 사회통합력의 약화가 우려됨
- 많은 국가에서 노사정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까닭은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즉 사회통합력의 약화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영국처럼 노동배제적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나라의 경우, 구조조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즉 임금 격차의 확대와 사회적 양극

화의 진전,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증폭이라는 비용을 감수해야 했음

- (노사정 합의 유지의 함정) 만장일치제와 합의 구조 자체에 대한 집착이 합의 내용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함

- 통상의 노사정 합의 구조는 실질적인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3자합의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음. 따라서 급박한 시안의 결정이 지체될 우려가 존재하며 ‘결정의 의도적 지연’ 자체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노사의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때 정부가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려 할 경우 합의 내용 자체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 정부가 합의 구조에 집착할수록 합의 구조를 깨려는 압박 자체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노사의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가 노사 양측을 합의 구조속에 계속 묶어두려 하다 보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면서 이런 압력 수단을 사용하는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로 합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음

- (노사정위의 필요 조건) 노사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해 가야 함

- 노사정위의 기본 방향은 사회통합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사정 합의를 견지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함정을 회피해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 모두 대화와 타협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함
- 경제주체들이 장기적 안목을 가질 때 비로소 대화와 타협이 가시화될 수 있음. 즉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서로에게 장기적으로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임. 이때 비로서 노사가 모두 승리하는 ‘윈-윈(Win-Win)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노사정위가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력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노동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반대하는 까닭은 그에 따른 단기적 고용 불안을 염려하기 때문임.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저해될 경우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쟁질서 속에서는 국내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임

(채 창 균 ckche@hri.co.kr ☎724-4031)